

I. 통상현안정보

■ 터키정부, 아시아 저품질 수입품에 CE 마크 의무화 정책 발표

[정책 발표 후 최근 현황 및 파급효과]

□ 발단

- 2004 년 4 월 10 일 터키정부(대외무역청)는 수입품에 대한 통관절차 강화 조치를 발표함. 동 조치의 골자는 "비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(주로 컴퓨터관련제품, 메모리칩, 의료장비 등)의 경우 CE 마크의 획득은 물론 TSE(터키표준협회)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"는 것임.
- 즉,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는 CE 마크만 필요하며, 비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는 CE 마크의 획득과 함께 터키 세관에서 실시하는 TSE 테스트를 거쳐야 통관이 된다는 것임.

□ 통관마비사태 발생

- 동 조치가 발표된 후 약 10 여일이 지나면서 통관지연사태가 발생하였고,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함.
- 통관지연이 발생한 이유는 TSE 테스트를 받아야하는 품목이 대폭 증가하였지만 TSE 가 각종 제품(특히 첨단제품)을 테스트할 인력과 필요장비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며, TSE 테스트를 관장하는 터키 관세청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한 반면, 동 조치를 발표한 터키 대외무역청의 경우는 문제가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기도 하였음.

□ 업계의 반발

- 수입품의 통관은 사실상 마비되었고, 터키 수입업체들을 중심으로 집단적인 반발이 나타남. 터키정보산업협회(TUBIDER)는 4 월 26 일 6 천여 회원사에 공문을 발송해 터키 산업부와 Tuzmen 정무장관에게 항의편지를 보낼 것을 종용했고, 그 외 각종 협회가 이에 동조하였음.
- 또한 터키에 주재중인 각국의 정부기관에서도 동 문제의 심각성을 터키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기 시작함. 급기야 최근에는 현대자동차가 부품의 조달이 안되면서 생산라인 하나를 줄이는 조치를 단행했고, 도요타의 경우도 생산중단을 준비중인 상태임.

□ 터키정부의 대응

- 터키 업계 및 각국 정부의 항의가 전달되면서 터키 정부는 동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함.
-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한 터키정부의 방침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.
 - 완제품이 CE 마크를 획득한 경우에는 그 부품에 대해서는 CE 마크의 제출 의무화를 폐지

- 미국, 캐나다, 일본 제품의 경우는 동 조치 대상에서 제외(*업계에서 전해준 소식임)
- 이 외에도 터키정부는 이번 조치의 대상품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많은 품목이 TSE 테스트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개선조치가 있을 것으로 암시함.

□ 최근 현황

- CE 마크를 획득한 제품의 경우는 당초 방침대로 TSE 테스트를 거치기는 하지만 그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 것으로 파악됨. 즉, 실제 테스트보다는 관련서류의 검토를 거쳐 통관을 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. 또한 생산에 투입되는 부품 등 중간재의 경우는 증빙서류의 제출로 통관시키겠다는 터키정부의 발표가 5 월 10 일 있었음.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동 사태는 터키정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통관절차를 대폭 완화시키면서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됨.

□ 파급효과

- 컴퓨터 관련제품, 전자저울, 의료용구, TV, 오디오, 비디오, 모니터, CD Rom, 자동차 부품 등 광범위한 제품들의 수입통관이 지연되면서 수입업자들의 판매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, 수입 부품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터키내 제조업체들의 경우는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음.

[주요국의 대응 동향]

- 동 사태가 발생한 후 각국 정부기관에서는 터키 정부에 공식적인 항의를 통해 자국 생산품의 통관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임.
- 그 결과 미국, 캐나다, 일본 제품의 경우는 비 EU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통관이 되었다는 정보도 접수되었었음. (다만, 불투명한 현지 사정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며, 대외무역청 관리 역시 이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음)

[우리나라의 대응 방안]

- 기본적으로 동 사태의 책임은 구체적인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책을 실시한 터키정부에 있음.
- 하지만, 우리나라의 경우 터키정부에 대한 외교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(현지 업계 반응 종합), 이에 따라 동 사태의 발생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됨. 이스탄불 무역관에서는 터키 대외무역청과 관세청에 항의 팩스를 발송하였으며, 주터키 한국대사관에서는 관련자 면담을 통한 항의 등 동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바 있으나 큰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터키의 경우 아직도 관료사회가 투명하지 못하며, 무시하기 힘든 나라의 로비가 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. 따라서 동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상태이긴 하지만 비슷한 경우를 대비한다면 한-터키 우호관계의 구축을 통해 외교력을 키우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안이라고 판단됨.

(문의처 : 이스탄불무역관 장수영 sooyoung@kotra.or.kr)